

# “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” 2023 정부 업무보고



#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3.(화) 별도공지	배포 일시	2023. 1. 2.(월) 14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장 김배성 (044-201-3201)
	기획담당관	담당자	서기관 김태웅 (044-201-3197)

## 내 집 마련은 더 쉽게,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

- '23년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,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-

### < 2023년 핵심 추진과제 >

1.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
  -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+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
  - 철도 + 도로 +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 강화
2.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  - 전매제한, 실거주,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 정상화
  - 공공분양주택 「뉴:홈」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개시
3.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  - GTX-A 시험운영 및 노선 확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GTX 구축
  - 규제혁신과 본격적인 실증으로 자율주행·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조기 안착
4.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  -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건설노조·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
  - 지역별 전략과 패키지 수출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
5. 안전하고,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  - 교통사고·건설사고 사망자 10% 이상 감축
  -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·광역버스 혼잡도 완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3일(화) 청와대 영빈관에서 「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,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」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.
- 국토부는 올해 ①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, ②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, ③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, ④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, ⑤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.

## 1.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

### 1]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-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

#### □ 「**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**」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

-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(30만→100만㎡)하고,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.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. 주거·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('23.上)한다.

#### □ 지역과 함께하는 「**권역별 지원전략 수립**」

-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·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.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.

### 2]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

#### □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「**지역 성장거점 조성·고도화**」

- 원자력수소생산,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한다. 기존 도심은 세제·규제특례 및 금융·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.
-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('23.上)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,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,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
## □ 「국토의 입체적 개발」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

-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. 철도역사·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·상업·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('23.上)하고,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('23.下)한다.

## 3 지역 교통망 확충

### □ 촘촘한 「지역 철도망·도로망」 확충

-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\*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, 경전·전라·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('23.下)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\* 부산~양산~울산, 광주~나주, 대구~경북, 대전~세종~충북, 용문~홍천

- 신규 고속도로·국도를 적기 개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,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-중소도시 간 접근성도 높인다.

\* (고속) 아산-천안 등 3개 노선 (국도) 청도-밀양 등 20개 노선 (방사형) 상패-청산 등 3개 노선

### □ 「지역 신공항 프로젝트」 차질 없이 추진

- 가덕도 신공항,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·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.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('23.上)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한다.

## 2.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
\*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

### 1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

#### □ 주택시장의 「과도한 규제 정상화」

-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,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→3년, 비수도권 최대 4년→1년으로 완화('23.3)하고,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(법 개정 추진)한다.

-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 12억원),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(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)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(‘23.3) 및 특별공급(‘23.2)이 가능해지며,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(‘23.上)한다.

##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

### □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「자금조달 지원」

- 자금시장 경색으로 PF-ABCP 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(‘23.1)하여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또한,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(‘23.1~)한다.

### □ 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「주택공급 기반 확충」

-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.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,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.
-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,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하고,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 또한,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(‘22.11~)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(‘23.1~) 수립 과정에서부터 양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 아울러,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.

## 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

### □ 청년·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「공공분양주택 뉴:홈 50만호 본격 공급」

-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(나눔·선택·일반형)은 「뉴:홈\*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 공급에 착수한다.
- \* ‘첫집, ‘새로운 주거문화, ‘희망시작’의 의미 내포(22.11 국민제안 선호도조사를 거쳐 선정)
- ‘22.12월말 2.3천호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,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천호를 공급하여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.

□ **우수한 입지, 넓고 품질 좋은 주택, 「공공임대주택의 혁신」**

- 올해 총 10.7만호(수도권 7.5만호 이상)를 공급하되, 공급면적·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, 분양주택과의 동·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(시범사업)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.

□ **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, 「세입자 및 서민·취약차주 보호 강화」**

-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,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. 또한,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('23.1, 시범사업)한다.
- 또한,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함과 동시에, 피해자에게는 1%대 저리대출('23.1~)과 임시거처(28→100개소)를 지원하고,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한다.
-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.2~2.4%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**임대차 시장 건정성 회복을 위한 「등록임대 정상화」**

- 아파트(85㎡ 이하)도 매입형 장기(10년)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되, 최소 등록호수(2호) 신설, 장기(15년)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(수도권 6→9억원, 지방 3→6억원)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.

**4 시장원리에 부합하고,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**

□ **투명성·효율성 강화를 위한 「내 혁신」**

-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,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다. LH 퇴직 법무·감평가 수의계약 제한 강화(2~5년), 1급 이상 퇴직자 업무 관련 재취업시 계약제한(직전 1년) 등 전관예우를 근절한다.
-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LH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되, 지자체·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은 폐지·축소하고, 지역조직은 슬림화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.

## □ 공정하고 투명한 「부동산 시장질서 확립」

-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(‘23.下)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. 전세사기,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는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도 운영(‘22.12~)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한다.

## 3.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
### 1. **출퇴근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**

## □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「광역교통망 확충」

-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. GTX-A는 시험운행(‘23.下)을 거쳐 ‘24년 상반기 수서~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. ‘24년 하반기 운정~서울역 구간 개통에 이어, ‘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(‘28년 삼성역 연결)이며, 조기 개통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.
- GTX-B와 GTX-C도 조속히 착공한다. GTX-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, GTX-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.
- GTX 연장과 D·E·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- 한편, 올해 1분기에는 GTX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. 참여단은 역 점검이나 시험운행 등에 직접 참여하여 GTX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.
- 이에 더해, 대곡소사선(‘23.12)·별내선(‘24)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(일 203회 증차)도 확충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.
- 지역은 M버스(세종·담양)와 BRT(전주·제주)를 최초로 운행함과 동시에 운행기준 개편(BRT, 대도시→인구10만)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.

## □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신도시 광역교통 개선」

-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,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, 수요응답형 교통(DRT)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.



## 2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

### □ 심야 택시난 해소 등 「수요자 중심 교통서비스 확대」

- 서울 외 지역도 부제 해제 등을 통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('23.上)한다. 철도·지하철·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·결제 가능한 MaaS (Mobility as a Service)를 오픈('23.下)하여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한다.
  - 또한, 공항·철도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빈손여행 서비스를 확대\*하고, 철도-항공 연계승차권 확대(8→12개 항공사) 및 KTX 차량 리모델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.
- \* (공항) 제주·김포·김해·청주·대구 등, (철도) 부산·강릉·여수엑스포·전주·순천·목포 등

### □ 시민들의 대중교통 「비용 부담 경감」

-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%까지 확대한다. 알뜰교통카드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'알뜰교통카드 플러스'도 도입('23.下)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지원한다.

### □ 국민 누구나, 언제 어디서나 「자유로운 이동 구현」

-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대상에 포함('23.9)한다. 노선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추진,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지원('23.7)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한다.

## 3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

### □ 미래 먹거리 창출, 「완전자율주행(Lv4)」, 「도심항공교통(UAM)」 구현

- 완전자율차('27)는 제작·운행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(~'24)하고,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('23.12)한다.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한다.
- 도심항공교통('25)은 UAM법 제정('23.6)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('23.8)한다. 드론·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을 시작('23.12)하고,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통해 차세대 물류 서비스도 구현을 앞당긴다.

## 4.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
### 1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

#### □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등 「산업현장 질서 확립」

-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('23.3) 하고,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하여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하여 산업질서를 확립한다. 아울러,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등 인력수급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.
-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,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.

### 2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

#### □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한 「원팀 코리아 진출」 확대

- 임기 내 연 500억불 수주 달성을 위해 올해는 350억불+@를 목표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다. 민·관 합동 “해외건설 수주지원단”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 프로젝트를 선정('23.6)하고, 외교·금융·투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간다.
- ICT·원전·방산 등 범정부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며,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(PPP) 사업확대 등으로 수주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. 아울러,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('23.7), 애로해소 및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('23.3) 등 측면 지원도 강화한다.

### 3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#### □ 「국토교통 전통산업」 경쟁력 강화 및 「신규 국가핵심산업」 육성

- 건설산업은 금융안정망 구축 등 위기 대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획·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. 항공산업은 국제선 단계적 회복 및 LCC 노선 다변화 등 생태계를 회복을 지원한다.
-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차세대 배터리 안전기준 개발('23~), 항공운송 지원, 이력관리제('23.6)를 통한 리스·재사용 활성화 등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.



## 5. 안전하고,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### 1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

#### □ 사고 취약요인 집중 관리로 「교통사고 사망자 감축」

- 우회전 신호등 도입('23.1)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강화 조치와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소세(목표: 2.4천명 이하)를 유지한다.
- 철도는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(전문컨설팅, ~'23.上)하여, 국가사무인 관제·선로 유지보수의 기능도 재정립한다.

#### □ 「출퇴근 시간 혼잡 관리」 등 일상 속 新위험요인 대응 강화

- 수도권 도시철도는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('23.3)하고, 광역 버스는 전세버스 확대(135→203회), 2층 전기버스 확충(26→40대)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 완전해소를 추진한다.
- 전동킥보드 등 PM(개인형 이동수단)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('23.6)하고,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 기준 개선('23.12)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.

### 2 건설현장 안전 강화 및 국토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

#### □ 건설사고 사망자 「10% 이상 감축」

- '예방-대비-대응-복구' 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('23.10)하고,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한다.

#### □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「재해대응력 강화」

-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,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천 가구에서 1.5만 가구(공공1만+민간0.5만)로 대폭 확대한다.
- 도시공간은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('23.12)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방재능력을 제고한다. 방음터널은 전국 긴급점검을 실시('22.12.30~)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
-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“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,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,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다.” 면서,
- “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,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하여 민생을 조속히 회복함은 물론,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,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 김배성 (044-201-3201)
		담당자	서기관 김태웅 (044-201-3197)
		담당자	사무관 홍일산 (044-201-3205)
		담당자	사무관 권지현 (044-201-3203)
	규제개혁법무담당관	담당자	사무관 정재웅 (044-201-3225)



나라를 단단하게, 국민을 든든하게



#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

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



##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

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지역 개발

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거점 조성

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을 위한 교통망 확충

**그린벨트 지자체 권한 ↑**

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

30만㎡ → 100만㎡

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 예외

**도시계획 혁신**

다양한 용도·밀도의 도시개발 지원

**미래첨단전략 국가 산단 조성**

미래 전략산업 10개소 ↑ 지정

사업기간 1/3 이상 단축

**지역거점 육성**

도심융합특구, 기업혁신파크, 캠퍼스혁신파크, 투자선도지구

**기존거점 고도화**

혁신도시, 행복도시, 새만금

공공기관 2차이전 계획수립, 제2집무실 국회분원 건립지원, 국제투자 진흥지구 도입

거점간 1시간,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

철도 + 도로 + 공항

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 예타 추진,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, 신공항 8대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

**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**

지역사회, 기업대학, 국토부, 관계부처

균형발전 지원단

성장거점 육성, 지자체 권한 확대, 교통망 확충

## 2 시장 정상화와 든든한 주거복지로 국민 주거 안정 실현

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기반 강화

두텁고 촘촘한 주거약자 복지 구현

전세사기 근절

**서울 4개구 외 규제지역 해제**

정부 출범 당시 112곳 → 현재 4곳

**내집마련 전 과정 규제 정상화**

구입, 자금조달, 이동

청약, 대출, 실수요자 규제

청약규제 완화, 청년특공 신설, 모든주택에 중도금 대출허용, 실거주의무 폐지, 전매제한 완화

**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 확충**

정비사업 규제개선 완성, 1기 신도시 상시 채널, 공급자 신용보강

**임대에서 내집마련까지 주거사다리 복원**

77.6만호 임대분양 → 100만호 임대분양

임대(공공임대) + 내집마련(공공분양)

1인가구, 일자리, 옥아, 노령자, 면적 확대, 밀트인 개선, 공급 확대, 우수 입지, 부담 완화

**주거급여 확대**

135만명 → 146만명

**주거위기 가구·재해취약주택 지원**

선제 발굴, 적극 지원, 찾아가는 서비스, 공공임대 공급요건완화, 빈지하 등 취약주택 연 1만호 이상 해소, 주거 상황 지원

**범정부 전세사기 전담 TF**

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

안심전세App으로 정보제공 강화

보증금 신속반환, 저리대출·임시거처 지원

#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
##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

### GTX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로 단축

- GTX A 시험운행('23.4분기)
- GTX B 재정 설계('23.1)
- GTX C 착공('23.下)
- 연장, 신규사업 추진방안 마련('23.6)



### 광역버스 입석 해소

- 전세버스(203회) 집중공급
- 준공영제 확대(101→153개)

### 지방버스 운영 확대

-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 운행
- BRT 확대



##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

### 수요자 중심 서비스

- 빈손여행 서비스 확대 (철도, 공항)**
-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**  
정년 월 최대 1.5만원 저소득층 월 2.2만원 환급
- 전국 MaaS 오픈('23.下)**

### 교통약자 지원 강화

- 저상버스 도입 확대**
-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**

##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

### 자율차

### 자율주행 단계적 진입

- 운행+보험제도 마련 착수
- 시범운행지구 전국 20개소 확대

### UAM

### 항공모빌리티 시험비행 시작

- 전남고흥 실증('23.下)
- UAM법 등 제도마련
- 핵심기술개발 예타 추진

### 스마트 물류

로봇 드론 등 무인배송 제도화

공동주택 대상 실증

#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
##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 질서 확립

- 물류 산업** : 입입제 등 낮은 제도 근본 개선
- 건설 산업** : 노조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강화
- 부동산 시장** : 위법업체 행정제재 및 택지환수('23.上)

##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

- 항공 산업 생태계 회복**
  - 국제선 단계적 정상화
  - 공항 운영 정상화
- 디지털 전환**
  - 스마트시티
  - 디지털트윈
  - 자율주행 적용 고속도로

## 해외건설 4대 강국 도약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One team**
- 패키지 수주**
- 고부가 가치화**
- 민간 + 정부 + 공공기관
- 방산, 건설, 원전, K문화, 디지털
- 기술, 투자, 금융, 외교

#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

##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

### 교통사고 사망자 10% 이상 감축



- 도시철도 혼잡 완화방안('23.3)
- 방음터널 등 긴급점검·제도개선

## 건설·시설물 안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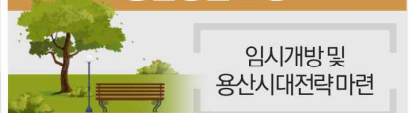
### 건설사고 사망자 10% 이상 감축



- 건설현장 안전 로드맵('23.10)
- 스마트 안전관리 (스마트 건설 안전기기)

## 생활친화형 인프라 조성

### 용산공원 조성



### 국민체감형 환경개선

- 공동 주택**
  - 관리비 투명화
  - 층간소음 저감
- 법인차**
  - 전용번호판 도입 ('23.6)



## 참고2

##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<b>(1)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</b>			
▪ GB 규제개선	녹색도시과	박정호 과장 류경진 서기관	044-201-3742 3747
▪ 도시계획체계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신연 사무관	044-201-3706 3709
▪ 초광역권별 국토교통 지원전략	국토정책과	김석기 과장 정승수 팀장 신용화 사무관	044-201-3646 4733 3651
▪ 도심융합특구	국토정책과	김석기 과장 정승수 팀장 신동하 사무관	044-201-3646 4733 4731
▪ 국가산단	산업입지정책과	김기용 과장 홍남경 사무관	044-201-3674 3695
▪ 공공기관 2차 이전	혁신도시 정책총괄과	한정희 과장 염지원 사무관	044-201-4456 4458
▪ 혁신도시	혁신도시 정책총괄과	한정희 과장 염지원 사무관	044-201-4456 4458
▪ 행복도시	복합도시정책과	최신형 과장 강은숙 사무관	044-201-3684 3686
▪ 새만금	복합도시정책과	최신형 과장 박병관 사무관	044-201-3684 3689
▪ 캠퍼스 혁신파크	산업입지정책과	김기용 과장 오지민 사무관	044-201-3674 3663
▪ 기업 혁신파크	복합도시정책과	최신형 과장 박병관 사무관	044-201-3684 3689
▪ 투자선도지구	지역정책과	장순재 과장 나은종 사무관	044-201-3662 3669
▪ 지역활력타운	지역정책과	장순재 과장 박원호 서기관	044-201-3662 3665
▪ 생활권 계획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신연 사무관	044-201-3706 3709
▪ 철도 지하화	철도건설과	오송천 과장 최승연 사무관	044-201-3950 3951
▪ 지하고속도로	지하고속도로팀	이종현 팀장 장인호 사무관	044-201-3904 4769
▪ 환승센터	광역환승과	이성민 과장 곽병철 사무관	044-201-5130 044-201-5136
▪ 지하공간 복합화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이재훈 사무관	044-201-3706 4972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광역철도	철도투자개발과	정수호 과장 육인수 서기관	044-201-3988 4133
▪ 고속철도	철도건설과	오송천 과장 이동호 사무관	044-201-3950 3961
▪ 5차망 구축계획	철도정책과	박병석 과장 박선영 서기관	044-201-3938 3940
▪ 민자철도	철도투자개발과	정수호 과장 서형우 사무관	044-201-3988 4633
▪ 간선도로	도로건설과	양희관 과장 허원석 사무관	044-201-3888 3891
▪ 민자도로	도로투자지원과	강 옥 과장 이용재 사무관	044-201-3897 3898
▪ 신공항 건설	공항건설팀	서정관 팀장	044-201-4137
		이양구 사무관	4138
		조중범 사무관	4144
	공항정책과	권오준 사무관	4141
	가덕도추진단	김대전 사무관	044-201-4329
		김대현 사무관	044-201-2503
▪ 지방발 국제노선	국제항공과	김남균 과장 신익승 사무관	044-201-4207 4211

## (2)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

▪ 규제지역	주택정책과	성호철 과장 임상준 사무관	044-201-3317 3324
▪ 전매제한	주택정책과	성호철 과장 강치득 사무관	044-201-3317 3320
▪ 실거주 의무	주택정책과	성호철 과장 강치득 사무관	044-201-3317 3320
▪ 중도금 대출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배기훈 사무관	044-201-3337 3339
▪ 청약제도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지현근 사무관	044-201-3337 3351
▪ 특별공급 기준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지현근 사무관	044-201-3337 3351
▪ PF대출 보증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최준녕 사무관	044-201-3337 3339
▪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	민간임대정책과	정천우 과장 김원섭 사무관	044-201-4100 4109
▪ 정비사업 활성화	주택정비과	박용선 과장 배윤형 사무관	044-201-3383 3384
▪ 도심복합사업	도심주택 공급총괄과	유혜령 과장 이선영 사무관	044-201-4380 4381

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소규모 정비	도심주택 공급협력과	이상옥 과장 황규오 사무관	044-201-4937 4944
▪ 공공택지	공공택지기획과	차상헌 과장 김세묵 사무관	044-201-4505 4515
▪ 1기 신도시	도시정비정책과	정승현 과장 김수현 사무관	044-201-4903 4958
▪ 공공분양	공공주택정책과	이소영 과장 송우영 사무관	044-201-4539 4514
▪ 공공임대	주거복지지원과	이중기 과장 김부병 사무관	044-201-4530 4533
	공공주택정책과	이소영 과장 백선영 사무관	044-201-4539 4533
▪ 주거안전망	주거복지정책과	이익진 과장 남궁부 사무관	044-201-4504 4740
	주거복지지원과	이중기 과장 최영록 사무관	044-201-4530 3358
▪ 전세사기 특별단속	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	김성호 단장 허예원 사무관	044-201-3434 3595
▪ 안심전세 앱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배기훈 사무관	044-201-3337 3339
▪ 전세사기 피해지원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배기훈 사무관	044-201-3337 3339
	주택임대차지원팀	박동주 팀장 장은석 사무관	044-201-3321 4150
▪ 서민·취약차주 보호	주택기금과	정진훈 과장 황도연 사무관	044-201-3337 3341
▪ 민간등록임대	민간임대정책과	정천우 과장 임성훈 서기관	044-201-4100 4101
▪ 임대차법	주택임대차지원팀	박동주 팀장 김애리 사무관	044-201-3321 3314
▪ 부동산 공시가격	부동산평가과	이 랑 과장 최승필 사무관	044-201-3422 3426
▪ LH 혁신	토지정책과	김명준 과장 박형재 사무관	044-201-3398 3399
▪ 부동산소비자기획단	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	김성호 단장 박태진 서기관	044-201-3434 3606

### (3)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

▪ GTX 기존사업	수도권광역급행 철도과	안재혁 과장 백정호 사무관	044-201-3964 3983
▪ GTX 확충사업	광역급행철도 추진단	이경석 단장 황세은 서기관	044-201-4166 4161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수도권 광역철도	철도투자개발과	정수호 과장 서형우 사무관	044-201-3988 4633
	광역시설정책과	정선우 과장 정재원 사무관	044-201-5100 044-201-5102
▪ 광역버스	광역버스과	배소명 과장 김준 사무관	044-201-5065 044-201-5069
▪ BRT	광역교통도로과	김재훈 과장 최보람 사무관	044-201-5115 044-201-5121
▪ 신도시 광역교통	광역교통정책과	이주열 과장 정경인 서기관	044-201-5045 044-201-5046
	교통서비스정책과	김경헌 과장 이승학 사무관	044-201-3823 3826
▪ 수요응답형 교통	광역버스과	배소명 과장 김준 사무관	044-201-5065 044-201-5069
	교통서비스정책과	김경헌 과장 장상준 사무관	044-201-3823 4756
▪ 택시 공급력 확대, 개선방안	광역교통경제과	김희천 과장 박태현 사무관	044-201-5080 044-201-5082
▪ 전국 MaaS	항공보안정책과	임월시 과장 조동현 사무관	044-201-4232 4238
▪ 공항 짐 배송 서비스	철도운영과	김민태 과장 이기찬 사무관	044-201-3970 4632
	항공산업과	김영혜 과장 이종선 사무관	044-201-4219 4231
▪ 철도 서비스	디지털도로팀	윤종빈 과장 장유진 사무관	044-201-4130 3928
▪ 항공 마일리지	광역교통경제과	김희천 과장 박태현 사무관	044-201-5080 044-201-5082
▪ 스마트톨링	생활교통복지과	최정민 과장 최희정 사무관	044-201-3797 4772
▪ 알뜰카드 플러스	교통서비스정책과	김경헌 과장 이승학 사무관	044-201-3823 3826
▪ 이동권 보장	생활교통복지과	최정민 과장 최희정 사무관	044-201-3797 4772
▪ 버스 사각지대 해소	자율주행정책과	박진호 과장 박미희 사무관	044-201-3847 4801
▪ 교통약자 지원	자율주행정책과	박진호 과장 신현성 사무관	044-201-3847 3848
▪ 자율주행 C-ITS	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임유현 사무관	044-201-3835 3838
▪ 자율주행 제도	도심항공교통정책과	최승욱 과장 박지윤 사무관	044-201-4197 4215
▪ 모빌리티법			
▪ 도심항공교통, UAM			

주요 과 제 명	담당부서	담 당 자	연락처
▪ 드론산업	첨단항공과	김동현 과장 이석진 사무관	044-201-4307 4315
▪ 로봇·드론 무인배송	생활물류정책팀	이두희 팀장 이민규 사무관	044-201-4152 4156
▪ 스마트 물류	첨단물류과	박대순 과장 최은영 사무관	044-201-4006 4013

#### (4)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

▪ 화물운송	물류산업과	박진홍 과장 정일웅 사무관	044-201-4016 4018
▪ 철도물류 활성화	철도운영과	김민태 과장 김광수 사무관	044-201-3970 4636
▪ 건설 노조 불법행위	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팀	홍철 팀장 김병철 사무관 임희엽 사무관	044-201-4990 3521 3542
▪ 별떼입찰	부동산개발산업과	이대섭 과장 김진욱 사무관	044-201-3434 3438
▪ 건설 인력 수급	건설산업과	우정훈 과장 고명윤 사무관	044-201-3538 3539
▪ 건설공사 분쟁 해소	주택건설공급과	강태석 과장 이광우 사무관	044-201-3364 3369
▪ 건설·부동산업 위기 대응	건설정책과	장우철 과장 김태훈 서기관	044-201-3504 3507
	기술혁신과	유병수 과장 윤상원 사무관	044-201-3561 3570
	건설산업과	우정훈 과장 최 찬 서기관	044-201-3538 3544
▪ 건설 고부가가치화	기술혁신과	유병수 과장 윤상원 사무관	044-201-3561 3570
▪ 리츠산업	부동산투자제도과	백승호 과장 양국현 사무관	044-201-3411 3417
▪ 국제선 회복, LCC 육성	국제항공과	김남균 과장 신익승 사무관	044-201-4207 4211
▪ 항공사 통합	항공산업과	김영혜 과장 강윤진 사무관	044-201-4219 4223
▪ 배터리 산업 지원	자동차정책과	김은정 과장 홍예표 사무관	044-201-3855 3846
▪ 자동차 산업 지원	자동차정책과	김은정 과장 심형석 사무관	044-201-3855 3840
▪ 교통 데이터	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임유현 사무관	044-201-3835 3838
▪ 스마트 시티	도시경제과	윤영중 과장 장 원 서기관	044-201-3674 4097

주요 과 제 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디지털트윈	국토정보정책과	윤종수 과장 김시중 사무관	044-201-3458 3457
	공간정보진흥과	오성익 과장 안종태 사무관	044-201-3469 3471
▪ KASS 서비스	항행위성정책과	김동준 과장 장경준 사무관	044-201-4356 4350
▪ 건설 디지털화	기술혁신과	유병수 과장	044-201-3561
		박유서 사무관 김종현 사무관	3564 3566
▪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, 디지털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	도로정책과	한명희 과장 민인홍 사무관	044-201-3875 3876
▪ 스마트+ 빌딩	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조관우 사무관	044-201-3755 3758
▪ 해외건설 수주 지원	해외건설정책과	안진애 과장 이혜인 사무관	044-201-3516 3517
	해외건설지원과	안세희 과장 정승훈 사무관	044-201-3526 3527
▪ UAM·수소 항공기 인증기준	항공기술과	문석준 과장 원정윤 사무관	044-201-4284 4285
▪ MRO	첨단항공과	김동현 과장 김남극 사무관	044-201-4307 4225

### [5] 안전하고,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

▪ 철도안전체계	철도안전정책과	조성균 과장 김강문 사무관	044-201-4600 4602
▪ 교통사고 취약 요인 집중 관리	교통안전정책과	장구중 과장 최혜리 사무관	044-201-3230 3867
▪ 방음터널	도로시설안전과	김형철 과장 이군행 사무관	044-201-3927 3924
▪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	광역시설정책과	정선우 과장 정재원 사무관	044-201-5100 5102
▪ 항공안전	항공안전정책과	유경수 과장 강경범 사무관	044-201-4244 4255
▪ PM 주차	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문채빈 사무관	044-201-3855 3820
▪ 커넥티드카	자율주행정책과	박진호 과장 신현성 사무관	044-201-3847 3848
▪ 건설현장 안전	건설안전과	신윤근 과장 전진 사무관	044-201-3573 3574

주요과제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
▪ 건설 기자재 관리	건설안전과	신윤근 과장 김석태 사무관	044-201-3573 3579
	건설산업과	우정훈 과장 최 찬 서기관 박문신 사무관	044-201-3538 3544 4588
▪ 노후 시설 관리	시설안전과	김유진 과장 전대훈 사무관	044-201-4598 3587
▪ 재해취약주택, 반지하 주택	주거복지지원과	이중기 과장 김부병 사무관	044-201-4530 4533
▪ 건축물 재해대응	녹색건축과	김태오 과장 정우갑 사무관	044-201-3768 3772
	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조익희 사무관	044-201-3755 3760
▪ 도시공간 재해대응	도시정비정책과	정승현 과장 김상민 서기관 이근욱 사무관	044-201-4903 4904 4907
▪ 친환경 차량 전환	교통정책총괄과	김정희 과장 심동휘 사무관	044-201-3804 3788
▪ 고속도로 충전인프라	도로관리과	김철기 과장 가필순 주무관	044-201-4522 3920
▪ 건축 친환경	녹색건축과	김태오 과장 이승원 사무관	044-201-3768 4091
		최철민 사무관	3769
▪ 탄소중립도시	도시정책과	윤의식 과장 안연진 사무관	044-201-3706 3710
	도시활력지원과	김기훈 과장 정규철 사무관	044-201-3730 3733
▪ 용산공원	공원정책과	전성배 과장 정태현 사무관	044-201-2040 2033
▪ 생활친화 건축	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이채훈 사무관	044-201-3755 4082
▪ 공항소음	공항안전환경과	윤성배 과장 박권필 사무관	044-201-4347 4342
▪ 법인차 번호판	자동차운영보험과	김종오 과장 김태흥 사무관	044-201-3855 3858
▪ 공동주택 환경 개선	주택건설공급과	강태석 과장 오유택 사무관	044-201-3364 3366
▪ 도로개선	도로시설안전과	김형철 과장 이군행 사무관	044-201-3927 3924
	도로건설과	양희관 과장 김로타 주무관	044-201-3888 3893